KIEP 러시아분과 대외경제전문가풀 세미나(2022. 5. 27.)
엄구호 교수(한양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쟁점과 전망

1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나리오 1: 러시아 동부우크라이나 점령 후 정전(Short War)

우크라이나의 항전이 예상보다 거세고 서방의 무기 지원이 강화되면서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던 러시아군은 벨라루스로 퇴각하여 재정비 상황에 있다. 키이우 점령은 사실상 포기하고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의 육상통로인 흑해 북부연안 헤르손, 마리우폴을 점령한 후 애초의 전쟁의 목적이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금지와 동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민족의 인권문제 해결이었고 이를 달성했음을 선포하고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분할되며 과거 인도 카슈미르 지역과 같이 분할이후 내란이 지속되는 장기 분쟁지대화 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며 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어 푸틴이 정권에서 쫓겨나지 않는 한 분쟁은 장기화될 것이다. 정전이후 경제제재가 러시아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는가가 이 시나리오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시나리오 2: 러시아의 키이우 전면 재공격 (Long War)

1995년 체첸전쟁 실패이후 1996년 바로 2차 전쟁으로 이어졌듯이 러시아가 수토 탈환 전쟁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즉시 전면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쉽지 않으며 나토가입 제한 문제는 협상으로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전쟁을 도발한 이유는 푸틴 대통령의 속내가 우크라이나를 인질로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었다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여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 그리고 발틱3국과 지정학적 경계선을 그어야 원래 의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고 동부우크라이나 점령 후에도 어차피 제재는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중단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러시아의 전쟁 지속 여력이 있는가이다. 최근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에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고, 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공격보다는 저급 무기인 집속탄을 사용한다는 보도가 있어 러시아가 전쟁 자원을 거의 소진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1번 시나리오처럼 동부우크라이나 점령 후 일시 정전 후 일년 정도 준비 후 키이우 전면 재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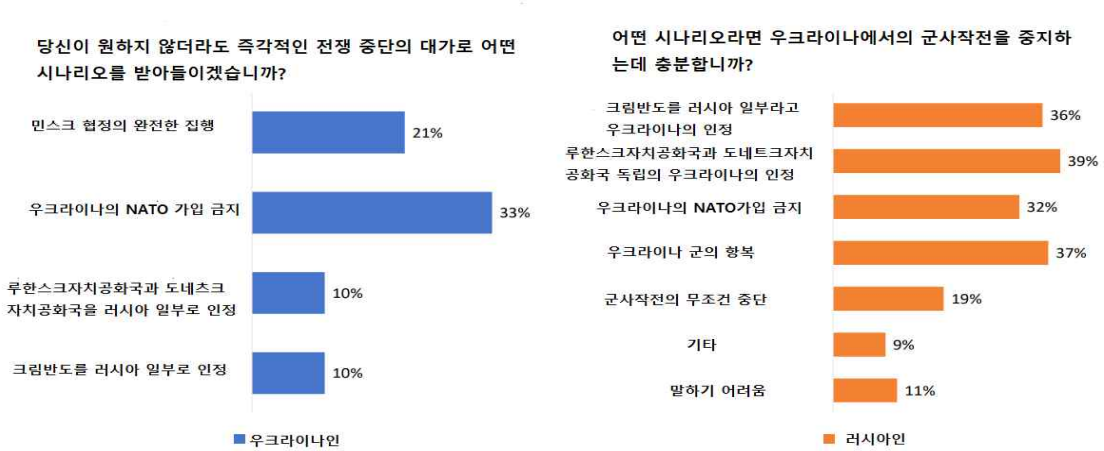
시나리오 3: 외교적 체결 (Diplomatic Solution)

그간 5차례에 진행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돈바스 문제라는 두 가지 의제로 좁혀졌다. 중립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측이 합의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마무리된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단 5차 회의 결과, 우크라이나는 나토 헌장 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 즉 만약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공격을 받는다면 안전 보장을 한 국가들은 3일 이내에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하는 국제협약을 맺는다면 중립국화에 동의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돈바스 및 크림반도의 영토 문제는 합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는 헌법 개정이 요구되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정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어차피 분명한 보장 방안이 없는 우크라이나 중립화는 합의하기 쉽지만 돈바스 문제는 영토문제로서 우크라이나가 합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금지 업적만으로 푸틴이 정권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전쟁이전으로 군 퇴각과 중립화 교환은 러시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을 봐도 쉽게 유추된다. 여론조사기관인 ExremeScan의 지난 3월 30일 여론조사 결과(〔그림 1〕 참조)를 보면 우크라이나인들은 종전 조건으로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자치공화국과 루한스크자치공화국 그리고 크림반도의 포기는 각 10%로 매우 낮고 민스크 협정 이행이나 우크라이나 NATO가입 금지와 같은 외교적 합의를 종전 조건으로 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다. 반면에 러시아는 도네츠크자치공화국과 루한스크자치공화국 그리고 크림반도의 합병을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나토가입 금지만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의견은 32%에 불과하다.

〔그림 1〕 전쟁 중지 조건에 대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의 인식



출처: ExtremeScan, 2022-03-31.

시나리오 4: 러시아의 사실상 패전 후 푸틴 실각 (Putin's Failure)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가 동부 우크라이나로 공격을 집중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이 지역에 정예군을 배치하고 있다. 마리우폴의 경우 도시가 거의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항전은 지속되고 있다. 만약 나토가 전투기 와 대공 방어시스템까지 지원하고 나선다면 러시아가 5월초까지 크림반도 육상통로까지 확보한 점령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동부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에 이르지 못하고 전쟁을 휴전하게 된다면 푸틴 대통령의 국내 입지는 약화되고 경제제재 심화로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반푸틴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러시아 국민들의 전쟁 지지도와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 현재로 그 가능성이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나마 독립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알려진 레바다 센터(Levada Center)의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전쟁 지지는 81%, 푸틴 대통령 지지도는 83%나 된다. 그러나 실제 전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이 여론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1,2번의 시나리오가 현재로는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전쟁상황 전개에 따라 3,4번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적은 것만은 아니다.

O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불가피하며, 향후 3-4년내 러시아 영토에서 전개될 수 있는 사태임. 전쟁을 해야 한다면 다른 국가의 영토, 인접국 영토, 형제 국가에서 싸우자는 것임.
- 전문가들: 발전모델 내 공급망 구축과 이에 기반한 발전모델 간 경쟁 격화(국가자본주의 세력의 반격) -- 금융자본주의 대 산업자본주의. 서구 의존적 러시아 현대화 모델 실패

O 전쟁의 해석 차이

- 장기화: 전쟁에 대한 의미 부여에 큰 격차

성패 단정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 증가

러시아는 승리를 선언하겠지만 군사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군사력 증강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전망됨. 새로운 경쟁 혹은 심할 경우 다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2 우크라이나 전쟁 후 국제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는 러-우간 양국 갈등 차원을 넘어서는 미-러간 체제 대립으로 보아야 함.

- 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자의 행태를 자신에 대한 체계적 도전으로 간주.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국내 소요를 러시아 중심 공동체에서 끌어오고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을 방해하고 우크라이나를 서구의 궤도에 굳게 강화하고 러시아의 서구 경계에 일종을 완충지대(cordon sanitaire)로 만들려고 이용하고 있다고 인식. 이런 인식이 러시아로 하여금 카라가노프 발다이 총장의 표현으로 "강철 주먹(with an iron fist)"으로 반응하게 했음.[1)]
- 미러 대립의 체계적 속성의 두 번째 증거는 양측이 각각의 내적 속성을 문제의 뿌리와 원인으로 본다는 것임. 이것은 냉전 초기에 적용된 분석과 유사. 당시 억지정책의 저자 George Kennan은 소련 체제의 내부 성격은 내재적으로 공격적으로 만들고 따라서 미국에게 억지와 대립 대안만을 남겨둠. 오늘날도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뒤의 주요 이유는 푸틴 정치체제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 수 있음.[2)] 경제와 국내정치 실패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공적 민주적 우크라이나 출현을 방해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공격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제국을 재건설하려 한다는 것으로 인식함. 이러한 견해의 찬성자들은 만약에 현재 러시아 국내정권이 변화한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외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수정주의(revisionist) 행태를 계속할 것임. 2014년 이래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접근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푸틴체제의 완전한 혐오(푸틴의 악마화)임. 우크라이나 갈등이 일어나자마자 미국 언론은 러시아와 지배정권을 악으로 묘사하고 심지어 히틀러와 비교하였음.

□ 러-우 전쟁은 중국에게 유리

O 카라가노프의 전망

- 승자: 중국 (대러시아 영향력 증가, 에너지/자원 수급에서의 이점)
  패자: 우크라이나의 압도적 패배(a biggest loser, 해체), 유럽의 큰 패배(a great loser, 일부 유럽의 유라시아 지지, 핵전쟁시 미국 지원 상실과 피해), 러시아 패배(a loser, 여전히 국가 존속,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 등장), 미국 역시 패자(세계의 섬으로 잔존)

---

1) Sergey Karganov, "Russia Needs to Defend its Interest with an Iron First," Financial Times, March 5, 2014.
2) Michael McFaul, Stephen Sestanovich, John J. Mearsheimer, "Faulty Powers: Who Started Ukraine Crisis?" Foreign Affairs, Nov/Dec 2014.

O 서구의 승리?

- 일본: 재무장 가속화(종심타격능력 확보 가능성;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내 군사적 재등장)
- 미국: 유럽국가 무장화/군비지출 증가, 중부유럽의 대미 안보 의존도 증가
- 유럽: 유럽군 가속화

O 서구의 관점: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푸틴의 패배자

러시아의 불안을 촉발시켰고, NATO를 다시 활성화했으며, 유럽 강대국, 특히 독일은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음.-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하락

O 서구의 딜레마

1. 우크라이나를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 -레드라인 회원국 공격 발생시 나토헌장 5조 발동? 핵무기 사용 가능성?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한다면 그 이후에도 러시아 경제를 멸망시키고 국가를 고립하는 것이 논리적 해결이지만 서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러시아는 더 권위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할 것(유럽의 에너지 문제)

O 국제질서의 해체와 금융, 에너지, 운송로, 시장, 공급망의 진영화 (G20 제재 참여 대 불참 10:10)

□ 러-우 전쟁은 글로벌 차원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것

- 러·우 전쟁은 불가피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NATO와 러시아 간 군사적 충돌은 물론 러·서방국가 간 대립심화로 비화되면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이는 한반도를 포함 동북아 안보·경제 환경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한·러/한·우크라이나 관계는 물론 한·미/한·EU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우크라이나 민족과 러시아 민족은 같은 동슬라브족이며 러시아 국가 역사의 모태가 키예프 공국임을 생각하면 같은 민족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대가로 경제지원과 안보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북핵 협상에서 북한을 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음.
- 우크라이나 위기가 장기화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일간, 중-러간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의 그

림자가 더욱 드리울 수 있음. 또한 러시아가 서구와의 전략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균형 수단으로서 북한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북중러 삼각협력체제가 더욱 선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음.

- 한-러관계는 미-러관계에 동조화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이번 사태로 미-러간 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한-러관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신냉전에 대응하는 외교적 방안 마련 필요

- 우크라이나 위기가 장기화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일간, 중-러간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의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음.
- 또한 러시아가 서구와의 전략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균형 수단으로서 북한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북중러 삼각협력체제가 더욱 선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음.

■ 네트워킹 강화, 다자주의 선도 등 지경학 수단 강화 필요

-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너무 밀착하지 않도록 러시아를 매개로 하는 지경학 수단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 수단은 창의적 소다자주의, 물류 및 에너지 등의 네트워킹 강화,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다자주의 선도 등이 되어야 함.
- 미국, 일본과 협력하는 북방정책만이 그 실현가능성이 크며 정책성과도 클 것임. 러시아과 중국과 과도하게 밀착하면 미국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북방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할 필요.
- 한/일/러 에너지 클럽은 에너지 안보가 급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 필요성은 물론 정치적 효과도 클 것임.
- 북미간 협상 진전에 따라서는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도 검토 가능할 것임.
- 민간과 긴밀히 협력 가능한 북방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 필요
- 철도협력이나 수소협력처럼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이익이 합치되는 분야는 국제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3 러시아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 디폴트 일어날 가능성은 반반

- 바이든 행정부는 5월 24일 기한이 만료된 후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러시아 채권 지급을 완전히 차단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모스크바를 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해외 디폴트에 빠뜨릴 수 있음. OFAC 면제:일반 라이선스 9A는 "미국인이 2022년 5월 25일 오전 12시(동부 일광 시간)까지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연방 국부 기금 및 러시아 재무부의 부채 또는 자본에 대한 이자, 배당금 또는 만기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이후 미국인이 계속해서 이러한 지급을 받으려면 특정 면허가 필요
-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빚진 거의 20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채무 불이행할 의사가 없으며 송금이 차단될 경우 루블로 지불하겠다고 천명
-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부채를 갚도록 허용하면 금고가 더 고갈되고 우크라이나에서 무기와 군사 작전에 쓰일 자원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사적으로 주장
- 러시아 국가 부채는 매우 낮고 여전히 자원이 있고 약간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따라서 계속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그리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나 디폴트가 되면 러시아 민간기업의 상황은 매우 악화될 것임(민간부채 약 1,300억달러).

■ EU의 러시아 천연가스 대체 어려울 것

-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2/3이상 줄이겠다고 발표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로부터 500억~600억m3 조달해야--〉 사실상 불가능
-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현재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량은 어느 나라로도 대체 불가능
- 러시아 노박 부총리: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시 유가 300달러로 급증할 것

■ 러시아 경제 대책 나름 성공적

- 전쟁 후 러시아는 수입대체와 국내산업 구조조정 정책 가속화 전망
- 탈달러화 본격화
- 가스가격 루블 지불 (3월 30일 러시아 하원의장 비료 곡물 석유 석탄 철강 목재 등 루블로 수출 제안, 메드베데프 지역통화시대)
- 국내시장 보호와 고용유지 최우선
- 경제자유화와 유연성 보장
- EAEU 공동 노력
- 상품 병행수입 허용(브랜드 소유자의 직접적 허가 없이 상품 수입, 현재는 권리자 또는 공식 딜러만 수입 가능, 자동차 및 전자 부품 등 영향 예상, 중소기업, 개인 기업 기회 확대, 전자상거래에서도 벤더들에게 허용) (활용방안 강구)

■ 중국은 러시아 경제 위기의 탈출구?

- 금년 중러교역 증가율 12%(중국교역증가율 7.75%보다 높음. 그러나 전쟁이후 3월 증가율 12.76%는 2월 증가율 25.7보다는 낮음, 2021년 중러교역 성장률은 36%) 중국의 4월 러시아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 그러나 대러 수출액은 25.9% 감소
- 금융협력은 가속화 (Union Pay-Mir, CIPS-SPFP)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중 2021년 13.1%(2017년 6월 0.1%), 달러 비중은 같은 기간 45.3%에서 16.4%로 떨어짐. 지난 20년 동안 미국 달러가 금에 대한 가치를 80% 잃음(러시아는 1그램에 5천 루블 금본위제).
- 에너지 협력 증가에는 한계 (현재 중국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비중 15.5%, 시베리아의 힘2 2024년 완공).

4 우크라이나 사태의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1. 글로벌 경제 및 정세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특히, 분쟁 발발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은 수입국인 한국경제에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구매력 감소 유발
-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가격 상승이 비석유제품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는 경우,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이용하는 기업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산업별로는 석유제품의 투입비중이 높은 운송서비스(3.2%)와 화학제품(2.7%)에서 비용증가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3)]
- 석유제품가격 상승이 비석유제품가격으로 전가되면 소비자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가계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

○ **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 불확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잠재적인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석유 가격이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우랄산 원유의 세계 시장 가격은 1월 말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였음.
- 유가는 2014년 가을 이후 하락세를 오랜 기간 유지하였다가 최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다시 전 고점을 향해 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물론 전쟁이 발발할 경우 석유가격은 최소 125불을 넘어 전 고점도 금방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데 러시아에 심각한 제재가 가해질 경우 유가는 175불, 천연가스 가격도 200불에서 250불까지 치솟는 등 잠재적인 가격 상승폭이 매우 높을 것임.
- 러시아 천연가스가 각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각국이 겪게 될 문제가 다른데 독일은 천연 가스의 비중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3을 차지하지만 러시아 이외 노르웨이로부터 약 31%, 네덜란드로부터 약 13%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어 다소 위기를 헷징할 수 있는 상황인 반면 오스트리아는 천연

3) 천소라, 정규철,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 KDI 경제전망 2021, p. 53.

가스가 총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모두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도 같은 상황임. 양국은 전력의 약 3분의 1을 천연가스에 의존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각각 천연가스의 약 70%와 9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천연가스 공급이 최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많음. 러시아가 만일 적극적으로 천연가스를 차단한다면 독일 전력회사들이 러시아와 향후 새로운 10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됨에 따라 러시아 역시 자신의 고객을 잃어버릴 수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경유하여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바로 차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것인데 독일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음.
- 장기적으로 EU의 높은 에너지 가격과 지속적인 에너지 불안정으로 인해 제조 및 기타 비용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결국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이 문제에 대해 EU가 통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당연히 비축유 확대와 긴급 대여 수단을 쓰겠지만 보다 장기적 안목 필요**

- 한국의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이 70%에 다다르는 상황에서 미러 및 미중간 갈등이 남중국해 항로 안전을 불안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국 비중이 가장 큰 카타르(23%)와 미국(14%)의 LNG가 유럽 시장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공급 안정성이 큰 러시아 PNG의 장기공급 계약의 긍정적 검토를 해 볼 시점임.

□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 **글로벌 관점에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어 달러화 강세 기조가 강화되고 신흥국 경기 불안정성 재현 가능성이 높으며 러시아도 영향의 가시권에 있음.**

- 신흥국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자금의 이탈이 강화되어 러시아 금융시장에서의 글로벌자금 회수 및 루블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루블화 평가절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우리 기업의 대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러시아 내 주요 한국 기업의 환리스크에 각별한 대응 필요**

□ 반미 동맹 강화와 한국의 밸류체인 조정압박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적·외교적 대립이 장기화되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反러 블록이 강화되고 우리기업의 밸류체인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벨라루스, 이란과 함께 중국을 포함한 反미 동맹의 틀이 공고화 될 수 있으며 장기간 대립관계 지속 가능
- 서방의 입장에서 한국의 反러 공조를 요구할 때 러시아 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현지화 되어있는 한국의 가전, 자동차, 식품 기업을 중심으로 서방의 압박이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

□ 글로벌 곡물 시장 불안 가능성 큼

○ 곡물 시장 불안

-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있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로 곡물, 식물성 기름은 유럽과 중국 뿐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수출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지난 20년 동안 풍족한 수확 덕분에 세계적인 곡창지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는데 옥수수, 보리, 호밀의 최대 수출국이며 특히 밀은 전 세계 식량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20년에 밀 2천400만t을 수확해 이 중 1천800만t을 수출하여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 되었고 2021년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수출의 12%, 옥수수 16%, 보리 18%, 유채 19%를 차지하였음.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 중단은 많은 국가들에게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을 것임.
-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경지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에 가장 취약한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쟁이 일어날 경우 피해가 농업지대의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침공할 경우 우크라이나 밀이 하르키우,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자포리치아, 케르손 주 그리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의 통제 하에 있는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전쟁이 발발하여 러시아군으로 서쪽으로 진군하는 초기 경로에 놓여 있어 우크라이나 밀 생산과 수출이 즉간 중단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식량 수입 비중이 높은 북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 취약 국가에서 사회불안 가능성 증대

○ 곡물·비료 공급 위기 식량자주율 높이는 전략 검토해야

-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이며, 비료에 들어가는 암모니아의 23%, 칼륨의 17%, 요소의 14% 및 인산염의 10%를 공급하는 국가임. 코로나 위기로 이미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곡물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중국이 이미 국내 사용을 위해 요소와 인산염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예약한 상황에서 러시아 공급망을 잃으면 주요 비료 성분의 추가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약 27%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해외 농장 개발이나 해외 곡물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필요한 식량을 해외에서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식량자주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임. 그간 많은 노력을 해온 러시아 극동지역 농업투자 효율화 방안을 재검토하고 우크라이나 농업 투자에 대한 현실적 방안도 마련해야 함.

□ 글로벌 철 및 비철 금속 시장

○ 철 및 금속 공급 차질 가능성

- 러시아는 세계 니켈 수출 약 49%, 팔라듐 42%, 알루미늄 26%, 백금 13%, 철강 7%, 구리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방용품, 휴대전화, 의료 장비, 운송, 건물 및 전력에 대한 전 세계 니켈 수출량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촉매 변환기 및 전극 및 전자 제품용 팔라듐과 차량, 건설, 기계 및 포장용 알루미늄의 4분의 1은 가격에 엄청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임.
- 팔라듐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위기로 최대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소비자와 투기자들의 구매를 촉발하면서 지난 2주 동안 가격이 25% 상승하였음.
- 코발트와 기타 고온 금속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전쟁 시 항상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생산자와 무역상들이 이미 크롬 등 다양한 금속에 대한 사재기를 하였고 러시아 공급업체와의 장기 계약(LTC)을 하였기에 당장은 공급차질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제재 등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 차질이 우려

○ 에너지 가격 인상 위험에 의한 금속 생산 차질 가능성

- 에너지 비용은 금속 산업의 주요 도전 과제로서 생산업체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새로운 격변으로 이어질 경우 잠재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임.
- 수개월 동안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운임으로 실리콘 및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

적인 금속의 생산업체는 이러한 추가 비용 압박을 계속 감당할 수 없을 것임.
- 수요 측면에서 합금철 공급업체는 높은 에너지 비용이 주요 고객인 탄소강 및 스테인리스강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주요 금속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해외자원개발사업 확대로 대응해야**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패 이후 해외자원개발은 크게 위축되었음. 신냉전이 심화되면 주요국의 원자재 무기화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큼.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검토해야 할 시점임.
- 해외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과거 정부의 실패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내공기업의 해외자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에 따라 칠레 산토도밍고 광산 등 총 4개 자산을 매각했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가진 15개 광산 지분도 처분할 예정이었음. 최근 매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지만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해외자원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제조업 및 글로벌 가치사슬**

○ **공급망의 거리 단축**
- 반도체에서와 같이 자유 무역에서 온쇼어링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방위 산업과 연결됨.
-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사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러시아와 중국의 분리를 더 많이 요구하기 위해(EU 자본이 러시아 석유 및 가스를 통해 하는 것처럼) 새로운 플랫폼으로 신속한 재무장을 향해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접근 및 통제 요구

○ **러시아 혁신 경제 압박**
- 푸틴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 및 디지털 경제를 옥죄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제재가 진행될 것임.
- 명분은 초음속 미사일 등 무기개발과 해킹 등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군사적인 명분을 앞세워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제품 수출입을 제재할 것임.

2. 서방의 대러제재 강화와 대응 방안

□ **금융제재**

○ 서방의 對러 금융제재(SWIFT 퇴출)가 시행될 경우 시행범위에 따르는 대처방안 모색

- 전면 시행 시, 러시아 은행을 통한 기업 간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러시아가 국제금융결제에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의 활용 또는 러시아 기업의 역외계좌(제 3국)를 통한 거래 지속 가능성 타진
- 러시아는 SWIFT 대체안으로 다음의 방안을 고려;
  ❶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 2014년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구축하였으며 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1개국 금융기관과 이용약정 체결
  ❷ CIPS(Chinese Corss 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중국이 구축한 결제시스템이나 SPFS와 마찬가지로 국제결제 비중이 현저히 낮음
- 부분 시행 시(러 주요 은행만 적용), 미적용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 가능
  * 2014년 서방의 금융제재시, 스베르방크 등 러 주요 5대 은행만 규제

○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 사전 준비 필요**
- 만약에 러시아가 SWIFT에서 차단된다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러시아내 주요 국내기업의 외환결제에 대해 러시아 정부와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

□ **통상제재**

○ **단기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제품군 및 모델의 현지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하되 궁극적으로 국산화 및 현지화를 통한 대처**
- 각 기업의 수출제품군 가운데 서방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제품군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출주력군 변경
- 장기적으로 한국 또는 제 3국으로부터의 완제품 직수출 비중 축소 및 현지밸류체인 강화를 통한 현지화(localization) 확대

5 북방정책 지속해야 하는가?

■ **신냉전으로 러시아와의 외교 협력 위축**

※ 우크라이나 위기가 장기화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일간, 중-러간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의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음.

※ 또한 러시아가 서구와의 전략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균형 수단으로서 북한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북중러 삼각 협력체제가 더욱 선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음.

-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균형적 조율 속에서 점차 보이스가 커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핵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관련국의 원만한 합의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중요성이 적지 않음.

※ 이런 구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매개로 하는 지경학 수단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 수단은 창의적 소다자주의, 물류 및 에너지 등의 네트워킹 강화,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다자주의 선도 등이 되어야 함.

※ 한러공공외교는 더욱 적극화하여 정부간 외교의 공백을 메우는 노력 필요(외교부나 KF 차원의 양국 싱크탱크 네트워크 회의는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북방정책 최소 수준에서라도 유지 필요

※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 근본 원인은 지정학적 부담이었음.

※ 미국, 일본과 협력하는 북방정책만이 그 실현가능성이 크며 정책성과도 클 것임.

- 미국, 일본도 참여가능한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북방정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북방정책이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지속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 성과의 승계 없이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폐단이 없지 않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북방협력의 동력도 상실되는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임.

※ 러시아과 중국과 과도하게 밀착하면 미국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북방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할 필요

※ 한/일/러 에너지 클럽은 에너지 안보가 급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 필요성은 물론 정치적 효과도 클 것임.

※ 북미간 협상 진전에 따라서는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도 검토 가능할 것임.

※ 민간과 긴밀히 협력 가능한 북방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하며 국제기구화 필요한 분야는 우선적으로 국제기구화 필요.

- 북방협력의 국제기구화는 협력의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기능적·부문별로 접근하고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임. 이번 정부가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국제기구화를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하며, 최근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가 되고 있는 수소산업 협력을 위한 역내 지역협의체 설립도 고려해 볼만 함.

※ 러시아의 재정 상황 악화로 PPP 사업 크게 늘어날 전망. 특히 EDCF와 연계하여 진출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 전쟁위기 동안 한국 기업차원에서 다음 사항 고려할 필요

1. 러시아에 대한 서구인들의 인식이 나빠지면서 ESG 경영의 차원에서 많은 서구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다. 러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도 국제적 이미지를 고려해서 러시아에서의 철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외국기업들의 결정을 업종별로 보면 지분투자 형태인 에너지 기업들은 지분매각을 하고 있고 하이테크 분야 기업들은 어차피 FDPR 제재와 환리스크 때문에 영업중지나 수출금지를 택하고 있다. 유통업의 경우도 고정투자가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철수를 결정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규모 영업 팀을 보유한 자동차 및 기술 회사와 투자 집약적인 제조업체 및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은 영구 철수보다는 중단 결정을 해서 평판도 유지하면서 사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들 기업들은 사업중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계속 지급하고 있다. 고정설비 투자가 큰 한국 제조업기업들은 완전 철수나 협력 중단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 투자 금지를 선언하여 국제 여론에 대응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2. 러시아의 SWIFT 탈퇴로 한국기업들의 수출입 대금결제에 혼란이 커질 것이다. 또한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한-러 쌍방 수출통제로 양국 교역활동은 경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중국 지사를 설립하여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 거점으로 활용하여 결제도 원화-위안화-루블화 결제 시스템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3. 러시아 항구 운항 축소, TSR과 유럽 구간이 중단되면서 물류 위기가 커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을 물류 중개국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수출통제 면제국가이므로 카자흐스탄에 무역지사 및 물류창고를 마련해서 러시아와의 공급망 연결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 중앙아와의 협력 유지 필요

※ 기존에 러시아권으로 중앙아를 보는 시각에서 중앙아-인도-파키스탄 등 남부경제회랑의 시각에서 중앙아를 볼 필요

※ 지정학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강대국과 다른 접근 필요. 인간중심 또는 인간안보

중심의 접근이나 정부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이익과 문화교류 및 공감대를 혼합한 기존 방식 강화 필요

※ 중앙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또는 러시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지역가치사슬 재편이나 루블화 사용 압력 강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 중앙아의 믿을 수 있는 외부 파트너로서 포지셔닝해야 함.